



뉴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임대소득 과세
02

2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228.66	↓ 코스닥	747.33
	(-1.10)		(-3.36)
↑ 금리 (연고채 3년)	1.81	↑ 환율 (원·달러)	1125.20
	(+0.01)		(+1.70)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결국은 혁신... '신형 갤럭시' 전세계 소비자 열광

(갤럭시 S10,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2019'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가 정제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짐이다. 오랜만에 현실화된 스마트폰 혁신에 전세계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관련기사 3, 8면)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2019'를 열고 신형 갤럭시를 공개했다. 오는 2분기에 글로벌에 출시할 예정이다.

◆혁신1. 가격

갤럭시의 혁신은 가격에서부터 시작한다. 갤럭시 S10 출고가는 보급형인 S10e가 89만원, S10은 105만6000원, S10+는 115만5000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경쟁 모델인 애플 아이폰 Xs 맥스 출고가(150만원)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이다. 메모리 용량도 아이폰 Xs 맥스는 64GB, 갤럭시 S10+는 128GB다. S10+ 1TB 모델도 174만9000원으로 더 낮은 가격에 책정됐다. 갤럭시 폴드는 1980달러(약 222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2. 폴더블폰 시대 선도

갤럭시 폴드는 폴더블폰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줬다. 접었다 펴는데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용 환경은 기본이다. 하드웨어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19를 열고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사진은 언팩 2019 체험존. /삼성전자

아이폰보다 20% 낮은 가격 폴더블폰 기술·내구성 문제 AI 적극활용 등 혁신성 화제

필요한 부분만 과감한 변화 소비자 요구도 적극 반영

는 더 세밀해진 힌지기술을 이용한 깔끔한 마감과, 기존 스마트폰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도 구현해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경쟁사들도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드 형식을 사용해 내구성 문제가 제기된다. 디스플레이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방식이라 취급이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 구동 능력도 갤럭시 폴드에는 적지 않게 뒤쳐질 전망이다. 최근 샤오미 린빈 총재가 공개한 폴더블폰 시연 영상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접자 화면이 어색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혁신3. 인공지능 확대

갤럭시 S10은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모델이기도 하다.

프로세서에 탑재된 NPU(신경망처리장치)는 사용자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다. 촬영 장면을 분석해 적합한 채도와 대비, 노출까지도 알아서 조절해준다.

빅스비는 이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설정도 보여준다. 바로 '빅스비 루틴'이다. 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사용자 사용 패턴

을 학습하고 배터리와 처리 속도까지 효율화한다.

경쟁사들도 NPU와 인공지능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갤럭시는 인공지능을 더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높다. 수동적으로 음성호출을 해야 반응하는 것이 아닌, 실제 비서와 같이 사용자를 돕는 방식이다.

◆혁신 4. 소비자 우선주의

새로운 갤럭시는 다양한 혁신을 추구했지만, '경계망동'하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사용자를 조용히 혁신으로 이끄는 모습이다.

특히 이어폰 단자를 남겨둔 것에 많은 사용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아이폰 단자는 스마트폰 두께에 큰 걸림돌,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버드를 출시했음에도 갤럭시는 이어폰 단자를 남겨뒀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은 웨어러블 기기 활용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기능으로 해석된다.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 등이 짧은 유지 시간으로 충전에 불편을 겪는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 것.

'슈퍼스테디' 기능은 동영상 촬영이 높아진 데 따른 배려다. 전문 장비 없이도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 훨씬 질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관련기사 14면) /연합뉴스

120조 반도체 클러스터 하이닉스, 용인에 요청

원삼면 일대 448만㎡ 규모 이천·청주와 삼각 클러스터



용인시 원삼면 일대 /연합뉴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용인일반산업단지는 20일 용인시에 이같은 내용으로 투자의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입지를 희망하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약 135만평) 자리다.

SK하이닉스는 2022년 공장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내외 50개 이상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하게 된다.

또 SK하이닉스는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창출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년간 총 1조 2200억원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상생펀드 3000억원, 인공지능 기반 상생협력센터 설립 및 상생프로그램 추진 6380억원, 공동 R&D 2800억원 등이다.

아울러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사업장에도 10년간 각각 20조원, 35조원 규모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천과 청주, 용인 삼각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 이미 청주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토지구입양해각서분양계약 다음달 체결키로 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입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유리할뿐 아니라, 다른 반도체 산업들과의 연계 및 물류 비용 절감 등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단, 지역균등발전을 무시한다면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 구미와 충청남도 등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규제 해소도 관건이다. 용인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총량제를 적용받는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별 물량' 형태로 공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김재용 기자

“요구만 하는 당정, 反기업정서 먼저 풀어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명분만 추진하면 실리 손해 기업 ‘정책 활성화’ 큰 부담”



지난달 15일 최태원 SK회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쌓인 '반기업 정서'와 '선입견'을 풀어 재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은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은) 기업의 실리를 고려하면서 명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또 “당정 요구를 다 들어주면 기업에게 경제까지 살리라는 것은 학생에게 모든 교과목을 잘하라는 얘기”라며 “명분만 추진하면 실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정의 재계를 향한 애매한 규제 해소와 정책 활성을 위한 요구는 줄을 잇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사

업 1호로 국회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규제를 풀어준다며 충전소 설치를 현대자동차에 맡겼지만, 국내 수소차 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893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며 장기적 투자를 하는 셈이다. 충전소 부지 임대비용 부담 여부도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라 현대차 측의 부담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가 깊어져야 할 정책 활성화 총대를 기업에 매게 하는 경우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달 이재

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흥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삼성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이 부족해 연간 2000~1만명을 육성한다는 데, 10배 정도 늘려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부회장을 “기대와 주목에 상응하게 잘해주길 바란다”며 압박 발언을 하기도 했다.

꼭 막힌 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실시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앞

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전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사회적 기업 관련 법에 대해) 거의 2년 전에 (대통령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데 (입법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언급을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윤창현 교수는 “당정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점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는 유지하면서 ‘공정경제’를 말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구만 하고 기업의 얘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이라며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화여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든가 윤 교수의 조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